

한국·몽골 경제협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金秀勇

- I. 서론
- II. 몽골 경제의 최근 성과
- III. 한·몽 경제 교류의 확대
- IV.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과 한·몽골 경제협력
- V. 전망과 정책방향.

I. 서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몽골의 대외경제교류는 소련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 몽골은 냉전 체제하에서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들과의 내부적 협의에 따른 무역거래에 치중하였다. 특히 소련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3/4 이상을 차지하였다. 몽골에 대한 무상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몽골 사회과학원 동양학연구소 공동주최로 1995년 7월 19일 Ulaanbaatar에서 열린 제 3차 한·몽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임.

원조나 원조 성격의 차관도 대부분이 소련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경제개혁, 소련의 붕괴, CMEA의 해체 등은 몽골의 대외경제교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몽골에서 경제개혁이 시작된 것은 1986년이지만 본격적인 개혁은 1990년에 새롭게 수립된 연립정부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나 동유럽의 국가들에서처럼 몽골의 경제개혁도 사유화(privatization)와 가격자유화(price liberalization)를 추진하는 것이고 대외 거래에서는 정부에 의해 독점되었던 무역을 민간기업에도 허용하고 무역의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련의 원조나 차관대신 ADB, World Bank 등 국제 기구와 미국, 일본, 한국 등 개별 국가로부터 무상원조나 차관, 직접투자 등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 사이의 경제교류는 1990년 양국간 외교 관계의 수립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간의 교류 규모는 매우 작다. 몽골의 지리적 위치, 몽골의 생산 능력 부족, 한국 기업의 몽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주요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저조한 두 나라 사이의 경제교류는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진전에 의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UNDP의 주관 하에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남한이 함께 참여하는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동북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고 따라서 이 지역과 중국, 러시아의 내륙지방, 몽골,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운송망의 구축이 촉진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과 몽골 사이의 경제 교류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교류 확대 전망과 양국에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몽골경제의 성과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과 몽골 사이의 경제교류 실적을 분석한다. 상품무역, 직접투자, 개발원조가 두 나라 사이에서 중요한 경제교

류의 형태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에 몽골은 중요하게 참여할 지리적 위치에 있거나 자본·기술을 공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전은 몽골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몽골 경제협력에 대한 두만강 지역 개발의 시사점을 검토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두 나라 사이의 경제교류의 확대 전망은 두 나라에서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특히 몽골에서의 개혁과 경제발전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의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는 앞으로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대하는가와 개도국 중에서 몽골에 대한 지원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이다. 두 나라에서의 이러한 정책 문제를 마지막 절에서 다루려고 한다.

II. 몽골 경제의 최근 성과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유화 정책은 모든 몽골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된 바우처(Voucher)를 사용하여 민간이 공공 자산의 경매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이었다. 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유화 계획은 1994년에 완결되었는데 이때까지 전체 국유재산의 80%정도가 사유화되었다. 사유화의 진전으로 1993년에는 GDP의 50% 이상을 민간 부문이 생산하게 되었다. 몽골 정부는 추가적인 사유화를 위해서 현금매각 방식으로 국영기업들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2단계 사유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광업, 에너지, 철도, 항공, 통신, 수도 등 대규모 공익사업은 국영기업이 맡게 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자유화는 1991년에 이미 큰 폭으로 진전되어 정부 통제가격 품목이 소매의 경우 220개에서 35개로 축소되고 수입재의 경우는 10개

품목이 되었다. 가격자유화로 인해 1991년 9월 현재 도시가계의 경우 총 지출의 60%가 가격 자유화된 품목에 대한 지출이었다.

최근 몽골의 경제개혁은 재정·금융정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 수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기존 세금의 부과 대상 확대, 판세 감면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출의 억제를 위해 전기·난방·교통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 정부 기관이나 학교에서 증원 억제나 인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은행 제도의 개혁, 자본시장 체제 개편 등의 사업이 IBRD와 ADB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¹⁾

최근 몽골 경제의 성과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1994년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고 역시 94년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 표 1 >에서 보듯이 1990년부터 93년까지 국내총생산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생산의 감소는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와 급격한 경제 개혁의 혼란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다. 어쨌든 94년에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환기의 조정 비용 지불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기에 반가운 현상이다.²⁾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1985-90년 기간에는 수출과 수입의 합계가 15억 달러 내지 19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991-93년에는 7~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1994년에는 5억 달러대로 낮아졌다.³⁾ 그러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던 것이 1

1) 정재완 (1995.4)

2) 폴란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총생산은 94년부터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3) 1990년 이후에 무역 규모가 축소된 것은 CMEA 무역체제의 붕괴, 소련의 해체, 국내생산능력 감소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환율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 표 1 > 최근 몽골의 주요 경제지표

단 위 : %,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1~3)
GDP 성장율	-2.5	-9.5	-11.6	-20.0	2.1	-
공업생산 증가율	-5.6	-11.7	-11.4	-10.6	-	-
농업생산 증가율	-3.7	-2.4	-6.2	-7.4	-	-
소비자물가 상승율	0	121.2	358.5	294.8	66	11.2
수 출	661	348	389	361	324	109
수 입	924	361	418	362	222	58
무역수지	-263	-13	-29	-1	102	51
환율 (Tug/\$)	5.63	40.00	40.00	396.51	415.00	433

자 료: ADB,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1994

EIU Country Report, Mongolia, 1st quarter, 1995

대의 경제정책 연구원, 지역 경제, 1995.4

994년에는 1억 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적자는 과거에는 소련의 원조와 차관에 의해 보전되었지만 1991년 이후에는 ADB, IMF, World Bank 등 국제 기구와 미국, 일본, 한국 등 개별 국가로부터의 원조나 차관에 의해 보전되고 있다. 몽골의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구리, 물리브덴 등 광산물이고 수입에서는 기계, 수송장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

물가 상승율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1992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몽골은 1993년 6월부터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Tg.150/\$1 의 환율은 Tg.400/\$1 로 크게 평가절하 되었다. 1994년 말에 환율은 415로 평가 절하되었고 1995년 3월에는 다시 433으로 절하

1990년까지 CMEA 국가들과의 무역은 소위 transferable Ruble로 평가된 것인데 이를 공정 환율율 사용하여 달러로 환산하였으므로 이후의 달러 표시 무역과 직접 크기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되었다. 몽골의 물가 상승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Tugrik의 평가절하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부터의 본격적인 가격자유화 정책으로 과거에 계속 통제되어온 소매 가격과 도매가격의 대부분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또한 몽골 화폐의 평가절하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경제 개혁에 따르는 높은 인플레이션도 마이너스 성장과 마찬가지로 몽골만의 현상이 아니고 러시아나 동구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어쨌든 물가 상승율은 1994년에는 두자리 숫자로 낮아졌고 1995년 1/4분기에는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몽골 정부의 재정·금융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한·몽 경제 교류의 확대

한국과 몽골 사이의 무역은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에 한국은 몽골로부터 54만 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입하였다. 한국의 대 몽골 수출이 처음 기록된 것은 1988년이었다. 1990년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사이의 무역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 표 2 > 에서 보듯이 1989년에는 100만 달러도 안되던 무역규모가 1992년에는 1,000만 달러를 넘었고 1994년에는 2,000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같이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절대 크기나 양국의 전체 무역에서 서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예컨대 1994년의 경우 몽골의 무역 총액에서 대 한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였고 한국의 경우 몽골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0.01% 수준이었다. 무역 규모에 있어 양국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와 같

< 표 2 > 한국의 대 몽골 경제교류

단 위 : 천 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수	출	140	515	5,306	8,785	3,533	18,700
수	입	463	2,736	426	1,810	3,980	4,844
합	계	603	2,706	5,732	10,595	7,513	23,544
직 접	투 자	-	-	-	-	-	2,720
무 상	원 조	-	448	710	400	305	545
EDCF	차 관 ¹⁾	-	-	-	5,200	-	-

자 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경제기획원, 대 개도국 경제협력 통계
 정재완 (1995. 4)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주: 1) EDCF 차관은 차관제공이 결정된 연도기준.

은 비중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두 나라의 무역구조를 살펴볼 때 앞으로 무역확대의 전망은 매우 밝다.

앞으로 한·몽사이의 수송시간이 짧아지고 통신이 편리해짐에 따라, 그리고 몽골에서의 생산 능력의 확장과 개인기업의 무역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광산물과 축산물, 의류 등의 대 한국 수출과 공산품 원료, 기계류, 내구 소비재 등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최근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상품의 구성을 보면 이러한 전망은 더욱 타당하다. 즉 < 표 3 > 에 나타난 1994년의 무역구조를 보면 극히 제한된 몇 가지 품목이 두 나라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도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생산이나 자원 부족에서의 보완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양국의 무역업자들이 상대

방의 시장이나 공급능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3> 한국의 대몽골 수출과 수입품목 (1994년)

단 위 : 천 달러

품 목		금 액
<u>수</u> <u>출</u>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HS 2710)	1,495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HS 5407)	1,175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HS 84)	1,287
철도 이외의 차량 및 부품	(HS 87)	4,096
항공기 및 부품	(HS 88)	5,013
기	타	5,634
합	계	18,700
<u>수</u> <u>입</u>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HS 05)	2,710
동광과 그 정광	(HS 2603)	1,734
기	타	400
합	계	4,844

자 료 : 관세청, 무역통계 연보, 1994. 12.

몽골과 한국은 1991년에 무역·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4년에 처음으로 3건이 허가 되었다. 의복 생산을 위한 2건의 합작 투자와 일반 무역업의 단독 투자 1건이 허가되어 몽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투자 허가금액 272만 달러중 1994년말 현재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24만 1천 달러에 머물렀다.⁴⁾ 몽골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총 규모가 1994년말 현재 7,396만 달

러였으므로 한국의 비중은 3.7% 정도가 된다. 가장 많은 투자 실적을 보인 나라는 미국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각각 1,000 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⁵⁾

몽골에 대한 한국의 공공원조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에 한국은 컴퓨터, 프린터등 44만 8천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기술협력으로서 2명의 연수자를 초청하였다. 이후 < 표 2 >에서 보듯이 기자재 공여 형태의 무상원조는 매년 소규모이지만 계속되고 있다.⁶⁾ 특히 한국정부는 1995년 4월에 10개의 개도국을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여 무상원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몽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대외 경제 협력기금(EDCF) 차관의 대몽골 지원으로서는 1992년 8월에 주사기공장 건설을 위해 520만 달러가 결정되었다.⁷⁾ 몽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400만 달러의 EDCF 차관요청은 현재 한국정부에 의해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청년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훈련생 초청, 무상 기술용역 제공 등의 협력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은 최근 국제기구나 개별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ADB는 몽골의 통신, 전력, 도로 농업 및 목축업 생산성 향상 등 11개 프로젝트에 1994-97년 기간중 3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키로 하였다. 일본, 미국, 독일 등 25개국과 World Bank등 6개 국제 기구가 참여하는 몽골 지원국 회의(Mongolian Donor Group Meeting)는 1994년 11월의 4차 회의에서 2억 1천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1991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이제까지 이 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한 금액은 9억 달러에 달한다.

4) 한국은행, (1995), P. 101.

5) 정재완, (1995. 4), P.70.

6) 무상원조 실적에는 일부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7) 차관 조건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상환기간이 20년이고 이자율은 연 3.5%이다.

IV.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과 한·몽골 경제협력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은 UNDP가 1991년 7월 울란바토르에서 동북아 소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정부간 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Meeting)에서 이를 동북아 지역의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계획 관리 위원회(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PMC)에서는 개발대상 지역에 관한 세 가지 개념이 검토·채택되었다. 즉 훈춘, 나진·선봉, 포시에트를 잇는 약 1,000 km²의 TREZ(Tumen River Economic Zone), 연길, 블라디보스톡, 청진 을 잇는 10,000km² 정도의 TREDA(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그리고 극동 러시아, 북한, 중국의 동북 3성, 몽골을 포함 하는 가장 넓은 NEARDA(North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Area)가 그것이다.

현재 TRADP의 회원국은 두만강에 접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3국과 몽골, 한국의 5개국이며 일본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6개국 사이의 경제교류는 몇 개의 쌍무적 교류를 제외하고는 몇 년 전까지 거의 없었다. 냉전의 종식과 경제개혁이라는 새로운 경제질서하에 이들 사이의 무역과 투자는 매우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교류 확대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이다.

극동 러시아, 중국의 동북부지방, 그리고 북한과 몽골은 자국 내의 다른 지역이나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지역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질서하에서 이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아졌다. 동해를 통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는 이들 지역의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새로운 상품과 자본의 진출 대상인 동시에 새로운 상품의 공급원으로서 이들 지역이 점차 중요하게 될 것이다.

몽골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러시아와 중국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확대는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나 중국을 통과하여 이들 국가의 항구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운송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두만강 지역의 항만시설이 크게 확장되고 이 지역과 몽골을 비롯한 내륙과의 철도 수송망이 신설되거나 개선될 경우 몽골의 상품무역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몽골과 두만강 지역간의 운송 루트가 개설된다면 한국, 일본 등의 몽골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울란바타르-초이발산-길림성-동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망의 건설은 두만강 지역과 유럽 사이의 늘어나는 운송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몽골은 이미 1993년부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중국 국경 근처의 Zameen Udd, 동부의 Dornod 지역 등 4개지역에 자유경제 지역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성공 여부도 수송비용의 문제와 관계가 깊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자유경제 지역에서는 두만강 지역까지의 수송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만약 자유경제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기계설비나 부품, 원자재 등의 수입이 두만강 지역을 거쳐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다면 두만강 지역개발 사업의 진전은 이들 자유경제 지역의 성공 여부에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Dornod지역은 두만강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더욱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이 크다.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에서도 그렇고 몽골에 대한 국제 기구나 개별 국가의 원조 사업에서도 철도 도로 등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운송의 이와 같은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통신, 에너지 등 다른 인프라 시

설도 필수적이다.

최근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몽골의 경제개혁과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두만강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서 2010년 몽골의 총 수출액은 1990년 가격으로 적어도 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⁸⁾ 이중 약 60%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동북 아시아 5개국에 대한 수출이다. 동북 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몽골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역시 1990년 가격으로 7천 500만 달러가 될 것이며 한국에 대몽골 수출은 9천 1백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양국 간의 무역 규모가 매우 작았던 1990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전망에서는 소위 국가간 무역의 gravity 모형을 적용하여 두나라의 GNP와 일인당 GNP, 두나라 사이의 지리적 거리, 두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가 아닌가 등의 변수가 두나라 사이의 무역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았으므로 한국과 몽골 사이의 무역은 비교적 작게 전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산업 구조상의 보완관계, 직접 투자의 크기, 원조 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gravity 모형의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V. 전망과 정책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몽골의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개혁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물가 상승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력, 석탄, 형석, 양모, 소세지, 우유, 등 주요 품목의 생산실적은 과거에 비해

8) S. Kim, Y.S. Lee, and K. Jeong (1994). pp. 243-250

부진하다.

몽골 경제의 단기적 과제는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주요품목 생산에서의 애로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경제 개혁의 방향이 생산의 부진이나 물가압력,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의 애로가 나타날 때마다 수정되거나 지연되도록 한다면 정책방향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가져와 앞으로의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애로 부문의 해소를 위한 외부의 원조가 중요하다. 다행히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로부터의 몽골 경제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몽골 경제의 발전 방향은 대외 지향적인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230만 정도밖에 안되는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수입 대체를 통한 공업화는 극히 한정된 분야에서만 타당성이 있다. 또한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하는 수출촉진 전략은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몽골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인 토지와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전략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축산업과 광물자원의 개발, 그리고 이들의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의 육성을 유망 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몽골이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하여 수출할 경우 그 시장은 매우 클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라는 몽골 경제에 비교할 때 무한히 큰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운송, 통신 등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만 산업 생산의 확장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열악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유망산업 육성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투자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선진 생산기술이나 경영기법은 우선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다 해도 이들을 배우고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중간 관리자로서 또는 숙련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경제 여건으로는 이와 같이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를 조달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해외로부터의 자본 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국제 기구나 개별 국가로부터 장기 자본도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민간 기업의 직접투자는 언제나 다른 가능한 투자 지역과의 비교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투자자본에 대한 보호나 조세상의 혜택, 임금수준, 임대료, 투자업종제한, 수출의무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1차상품의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은 흔히 1차상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공 단계를 거쳐 중간재나 완성재로 수출되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는 생각을 하는 수가 많다.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 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비용측면을 이들은 흔히 간과한다.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과정이 외국에 비해 비효율적일 때 이러한 투자의 수익률은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증가를 위해 원료 또는 낮은 가공단계의 상품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장기적으로 그러한 생산활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정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공과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몽골은 자원개발과 이들 자원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최대로 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다. 외화 획득이 제대로 안될 경우 역설적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자본 도입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자본 도입이 없이는 경제발전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많은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몽골은 과잉 인구의 문제가 없고 따라서

고용 기회의 창출이라는 부담이 적다. 오히려 경제발전을 위한 하부구조의 건설이나 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하게 될 인력의 확보가 문제로 등장한다.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산업간 노동의 재분배를 통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목축업 포함) 부문에서 제조업과 건설, 수송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노동이 이동되어야 한다. 지난 20-30년 사이에 농업 부문의 고용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⁹⁾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 방식의 개선을 통해 노동력을 도시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노력이 없이도 발생할 것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비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요인에 의해 노동은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되게 마련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이동의 장애요인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다.

몽골 경제개혁의 성공과 빠른 경제 성장은 자연스럽게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을 증가시키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직접투자나 무역의 증가 속도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정책변수는 바로 한국의 개발원조(ODA) 정책이다. 몽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EDCF차관, 연수생 초청, 기술협력 등의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가가 민간부문의 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EDCF 차관 사업은 그것이 자원 개발이든 인프라 건설이든 한국기업이 직접 사업을 담당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인적 교류와 기술과 상품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EDCF 차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술이전, 설비의 대체, 보수, 원료제공 등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제협력은 지속된다.

9) 몽골의 농업부문 고용 비중은 1970년의 47%에서 1991년에는 26%로 낮아졌다.

한국의 개발원조의 규모는 아직 매우 작다. 1993년의 ODA/GNP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¹⁰⁾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가들의 평균이 0.3%를 상회하는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현재 한국은 과거의 원조를 받던 위치에서 본격적인 원조제공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OECD에 정식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원조에 대한 국내에서의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증액 요청도 늘어날 것이다.

1991년에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창립 정신인 “함께 잘 사는 인류 사회 건설”이 잘 나타내듯이 가난한 이웃이 잘 살수 있게 돕는다는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차원만으로도 대외 원조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원조의 제공은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주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나 기술 수준이 그들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있지 않으므로 선진국 보다 한국으로부터의 원조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술 원조에서 그럴 것이다.

한국의 대외 원조는 앞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원조 대상 국가의 수를 줄여 실질적인 혜택이 수원국에 돌아가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국가를 축소시킬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중점 원조 대상국가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의 크기, 경제 성장 잠재력, 한국의 상업적 이익 등이 주요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인데 이런 요인을 따른다면 이미 경제성장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한국과의 무역 규모도 큰 나라들이 선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아니다. 따라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10) 1993년 한국 ODA 규모는 1억 7천 6백만 달러 였는데 이중 2국간 원조가 1억 7백만 달러고 나머지는 국제기구 분담금과 출자금이였다.

나라들은 제외하고 빈곤한 국가들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나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몽골은 앞으로 한국의 중점적인 원조대상 국가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동북아 지역 국가로 지리적으로도 비교적 가깝고 소득수준은 낮으며 개혁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한국 경제와의 보완관계도 높은 나라가 몽골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의 진전이나 남북통일 이후를 고려한다면 더욱 경제교류 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몽골을 무상원조의 중점 대상국가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무상 원조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이나 경제협력 차관의 제공에 있어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경제기획원, 「 1993년도 개도국 경제협력 통계 」, 1994.
- 관세청, 「 무역통계연보 」, 1994. 12.
- 정재완, “몽골의 최근 경제 현황과 개발 전략”,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 지역경제 」, 1995. 4.
- 한국은행, 「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 1995.
- 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1994.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 China, Mongolia, 1st quarter, 1995.
- Sooyong Kim, Young Sun Lee, and Kap-young Jeong,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Intra-Regional Trade in 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NEARDA) and Modalities for the Promotion of Intra-Regional Trade ”, i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tudies in Support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1994.

ABSTRACT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for Korea -
Mongolia Economic Cooperation

by Sooyong Kim

Professor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Performance of the Mongolian economy in recent years is getting better. After several years of negative growth, Mongolia's GDP increased more than 2 percent in 1994 over the previous year. The commodity trade balance also turned into surplus in 1994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The inflation rate in terms of consumer prices has sharply declined. All these changes indicate that the Mongolian economy is getting out of the shocks and disorders of the rapid economic reforms of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Reflecting these improvements, the volume of Korea - Mongolia trade and the Korea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are increasing rapidly. But the Mongolian share of Korea's total external trade or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remains at very low level, only 0.01 percent in 1994. Considering the complementary structure of industries and growth potentials of the two countries, the Korea-Mongolia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to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The realization of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will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two economies.

The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n economy

should be directed towar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based upon its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world market. The abundance of land and mineral resources and the relative scarcity of labor clearly define the comparative advantage sectors.

For Korea, the important policy issue is the expansion of the development aid programme toward Mongolia. Korea has selected Mongolia as one of the ten priority recipient countries of Korea's grant aid. But similar considerations should be extended to technical assistance and EDCF loans too.